

< 보도자료 첨부 >

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
2006-2009 EDCF 운용전략계획 주요내용

2006. 1. 3

재 정 경 제 부

목 차

I. 전략계획 수립배경	1
II. EDCF 운용 현황 및 평가	2
1. 지원현황	2
2. 평가	3
III. 2006-2009 EDCF 운용전략계획	8
1. 기금운용규모 및 지원전략	9
2. 지원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·기반	10
< 별첨 1 > 각국의 ODA 지원현황	14
< 별첨 2 > MDG 8대 목표	15
< 별첨 3 > 분야별 지원전략	17
< 별첨 4 > 지원절차 개선(안)	16
< 별첨 5 > EDCF 지원 성공사례	24

I. 전략계획 수립배경

- 최근 주요 선진국은 원조(ODA)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을 지원, 국가이미지 개선과 지지세력 확보를 도모
- 이러한 인도적·외교적 목적 외에, 원조를 활용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, 에너지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강력히 추구
 - 장기·저리(또는 무상)의 구속성원조(Tied Aid)를 활용,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자국기업의 국제경쟁입찰 수주를 지원
 - ※ 원조자금 단독 또는 수출금융과의 혼합신용 활용(美·佛·獨·스페인·네덜란드·덴마크 등)
 - ※ 신흥시장 여건이 구매자시장(buyer's market)으로 바뀔에 따라 장기·저리 금융지원이 국제경쟁입찰 수주의 핵심요소로 작용
 - 특히, 일본·중국은 막대한 원조자금을 동원해 우리의 최대 시장인 아시아를 공략, 우리기업이 Nut-Cracker가 될 우려
 - * 일본('03)의 대아시아 유상원조(52.5억불)는 한국(0.9억불)의 56배 수준
 - * 중국은 인니·베트남 2개국에만도 각각 3억불·2억불의 유상원조를 약정('05.7 중·인니 정상회담, '05.12 대베트남 원조자문그룹회의)
- 한편, 우리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*은 점차 증가
 - * '04년 무역수지는 대선진국 40억불 적자, 대개도국 334억불 흑자
 - * 석유·가스 등 필수자원의 대부분을 개도국에서 수입
- 이에 따라 선진통상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안정적·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 시장진출 확대, 필수자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
- 이러한 대외경제전략적 차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의 운용 현황과 과제를 점검·평가하고, 향후 중기 운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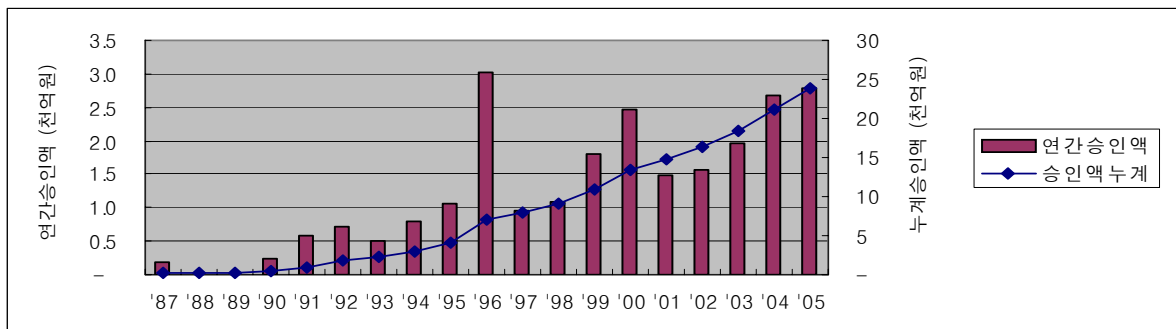
II. EDCF 운용 현황 및 평가

1 지원 현황

□ '05년말 현재까지 40개국 137개 사업에 총 23,807억원 지원승인(잠정)

○ 연간 지원규모는 '87년 179억원 → '05년 2,758억원으로 15배 증가

【 그림 1 】 EDCF 지원승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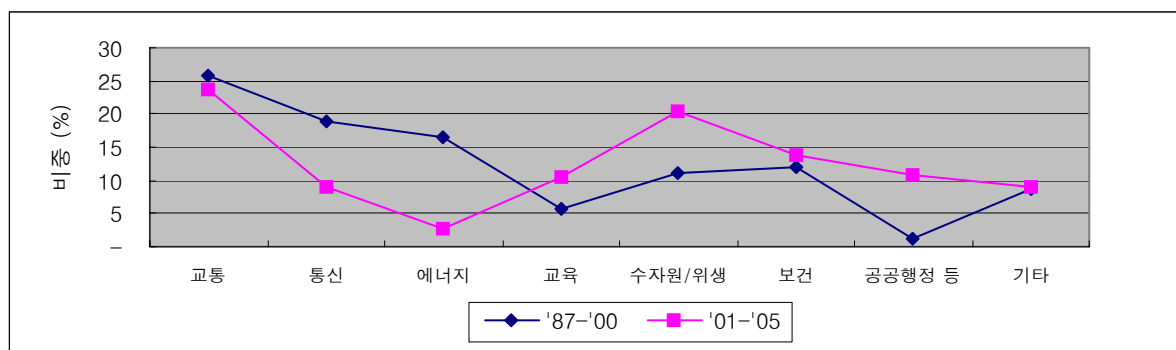
□ 지역별로는 경제·외교·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에 '02~'05년중 지원총액의 56% 수준 지원

【 표 3 】 EDCF 지역별 지원비중('02-'05)

아시아	중남미	아프리카	중동	동구·CIS	대양주	합계
55.8%	8.1%	11.1%	10.5%	13.6%	0.9%	100.0%

□ 분야별로는 '90년대까지 교통·통신·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위주로 지원해 오다, '00년대 들어 교육·보건·환경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MDG 달성노력에 부응

【 그림 2 】 EDCF 분야별 지원비중



(1) 그 동안의 운용성과

□ 개도국의 경제·사회개발 기반 조성 (별첨 사례 참조)

- 경제·사회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
- 도로·전력·통신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
- 환경·보건·교육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및 인간기본욕구(Basic Human Needs) 충족에 기여
 - * 경제인프라는 환경·의료·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(Access)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 (예 : 안정적 전력공급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수적)

□ 개도국의 자조노력(Self-Help) 강화

- 유상원조는 상환부담을 통해 수원국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부패 등 Governance 문제를 최소화('03년 IMF)하고,
- 개발효과가 큰 우수사업 신청 및 적절한 관리를 유도*해 수원국에서 자립국으로의 발전에 가교역할 수행

□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원조규모 확대

- '05년말까지 총 3,392억원(원금 1,733억원, 이자 1,659억원)의 원리금을 회수하여 기금재원으로 활용
 -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·사회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
- 향후 기지원 차관의 상환기한 도래에 따라 회수액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

□ 우리나라의 수원 및 개발 경험을 활용

- 우리나라는 과거 유상원조(공공차관) 도입을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이룩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경험 보유

※ '45~'80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(203억불)의 78%가 유상

- 재경부는 이러한 유상원조 도입 및 경제개발 기획·총괄·조정 경험을 토대로 유상원조인 EDCF를 운용,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을 지원

□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

-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·사회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위상 제고, 국제적 지지세력 확보 등에 기여

- 아울러, 우리기업의 수출·해외투자 촉진, 필수 해외자원 확보 등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

* 최근 EDCF 지원사업 중 16개 사업(3.6억불)을 기반으로 24개 후속사업(42.8억불)이 수주 또는 수주예정

* EDCF는 지원규모의 4배에 이르는 GDP 증대 및 11배에 이르는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('04 고려대 경제연구소)

- 이에 따라 일방적·시혜적 차원의 “퍼주기식” 원조가 아닌, 선발개도국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

※ 기획예산처 주관 기금운용평가(외부전문가가 평가)에서 '02년 종합 1위, '04년 경영개선·사업운영 2위 달성
(‘03년은 우수기금으로 평가면제)

(2)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

가. 기금운용규모 과소

- ☐ 세계 11위의 경제규모, 대개도국 경제협력 중요성 등을 감안시, EDCF 지원규모가 과소 (별첨 1)

* GNI 대비 ODA는 0.06%로, DAC 회원국 평균(0.25%)의 1/4 수준
* '03년 유상원조 규모(1.1억불)는 일본(59.8억불)의 1/50 수준

- ☐ EDCF 지원규모 확대의 전제조건인 기금재정도 부족

나. 경험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전략 미흡

- ☐ 베트남·인니 등 신흥시장의 부상에 따른 경험증진 필요성,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인도적 지원 필요성 감소 등 변화된 개도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·국가별 전략 미흡

○ 특히, 한·ASEAN FTA 추진과의 연계 등 대외경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미흡

- ☐ 정보통신·교육·의료·환경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·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전략 미흡

- 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수출에서 지주회사를 통한 해외투자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른 지원전략 미흡

- ☐ 석유·가스 등 필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전략 미흡

다. 효과적 사업집행을 위한 정책수단·기반 부족

1) 지원방식의 다양성 부족

- ☐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 활용이 미흡

- ☐ 혼합신용, 비구속성원조 등은 제도적 근거는 있으나 제도 미흡, 소극적 운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2) 지원프로세스의 문제점

□ 사업 계획 · 발굴 · 준비

- 국가별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중기 지원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원국의 건별(ad hoc) 수시요청에 의존하고 있어,
 - 경험효과가 큰 사업을 능동적 · 체계적으로 발굴 · 지원하는데 한계
- 수원국의 사업준비(타당성조사 등)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, 효과적인 사업발굴 · 준비에 어려움
 - * '05년도 EDCF 사업발굴지원 예산은 8천만원에 불과
- '04년 이후 수원국과 연 8-10회의 국 · 과장급 「정책협의」를 비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 노력을 강화중
- 그러나,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「국별지원계획」을 토대로 정례 「정책협의」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, 사업준비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

□ 사업 심사

- 경제적 · 기술적 타당성 심사는 WB, ADB 등 국제개발은행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: MDB)과 선진 원조기관의 기준을 원용해 별 차이가 없음
- 다만, 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주변지역 생태계 및 거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
 - * 주요 선진국은 원조사업 '환경심사기준'을 시행하는 등 개발과 환경이 양립하는 지속가능발전(Sustainable Development)을 추진
-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연 ·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심사를 강화할 필요

□ 사업 집행·사후관리

- 매 사업마다 복잡한 절차를 반복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
 - 특히, 정부간 시행약정(Arrangement : AR)에 평균 6.4개월 소요

【 표 4 】 지원단계별 평균 소요기간('01년 이후 평균)

지원승인 (재정부)	6.4 개월	정부간 시행약정 (AR)(외교부)	3.0 개월	차관계약(LA) (수출입은행)	6.4 개월	공급계약 (수원국)	5.2 개월	최초집행 (수원국등)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총 21개월 소요

- * 주요 선진국은 다년간의 지원 한도·조건 등을 정한 정부간 기본협정(Framework Agreement)을 체결,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간 시행약정을 생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

- EDCF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기본협정 방식의 정부간협정을 도입할 필요

3) 국내외 원조 기관·사업과의 연계 부족

- MDB 및 선진 원조기관과의 협조융자·정보교류 등 협력이 부족
- 국내 무상 금융·기술협력과의 연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

4) EDCF 운용인력의 규모·전문성 부족

- 현재 수출입은행의 EDCF 운용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해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적정 업무처리에 애로
- 또한, 수원국 현지에 근무하는 EDCF 운용인력이 없어 수원국과의 협력 및 사업 진행상황의 적기 점검·관리에 어려움

- * 수은은 '05.9월 현재 5개의 현지법인(사무소 포함)이 개도국에서 영업중에 있으나, EDCF 관련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음

- EDCF 운용인력의 전문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떨어지고, 정책수립시 민간전문가·산업계 등의 의견수렴도 부족

Ⅲ. 2006-2009 EDCF 운용 전략계획

— < 기본 방향 > —

◇ 운용 목표 :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

- 개도국의 경제·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장기·안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국가이미지를 제고
- 우리기업의 수출·해외투자과 필수 에너지·광물자원 확보를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

◇ 운용 원칙

- 「선택과 집중」의 원리에 의해 지원효과가 큰 지역·국가·분야를 집중지원
- MDG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달성에 기여하고, 개발 전략·계획 수립에 있어 개도국의 Ownership을 강화
- 수출·해외투자·해외자원개발·FTA 등 여타 대외경제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외경제정책의 시너지 제고
- 국제개발은행, 선진 원조공여국 및 국내의 여타 원조기관·사업과의 파트너십 강화
- 중기전략계획의 기본방향하에 우리나라의 경제·외교정책적 필요, 개도국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

1 기금운용 규모('06-'09) 및 지원전략

(1) 지원규모 확대

- '09년까지 총 1조9,400억원의 지원을 추진(승인 기준)
 - 지원승인(백억원) : ('02-'05) 89.7 → ('06-'09) 194.0
 - * 동 기간중 실제 자금집행은 1조 3,100억원 수준

(2) 지역별 · 국가별 지원전략

- 아시아 지원 규모 · 비중을 확대, 한 · ASEAN FTA 추진 등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강화
 - * 아시아 지원 : ('02-'05) 0.5조원(56%) → ('06-'09) 13.6조원(70%)
 - * 특히, 아세안 주요국인 베트남 · 인니 · 필리핀을 최우선 지원
- 여타 지역(30% 지원)은 신흥시장 · 저소득 자원부국 등 거점국가 중심으로 지원,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

(3) 분야별 지원전략 (상세내용 별첨 3)

- 전자정부 등 시스템통합(SI) 사업을 중심으로 한 「정보통신」 분야를 최우선 지원
 - * 정통부 등의 기술협력사업과 연계, 개도국의 Digital Divide 해소를 지원하여 「Digital 강국의 Digital ODA」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
 - 에너지 · 교통 등 「경제인프라」의 경우, 우리기업 밀집지역 등을 중점지원(Geographical Targeting)하여 해외진출 기반조성
 - * 전력 · 교통수단 등의 경우,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, 구축성 원조 지원이 가능한 비상업성 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
 - 보건 · 환경 · 교육 등 「사회인프라」의 경우, MDG의 주요 목표* 이며, 관련서비스 수출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점분야로 지정
- ※ 정보통신분야는 모든 국가에 지원을 확대하고, 기타 분야는 수원국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국가별로 중점분야 차별화

2 지원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· 기반

(1) 지원방식 다양화

□ 한국기업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개선

-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이 자국기업 낙찰을 조건으로 혼합신용(수출신용+원조) 공여추진시, 우리기업 낙찰조건부 혼합신용(수출신용+EDCF) 공여를 통한 대응제도를 운용중
- 앞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, 선진국과 같이 선제적으로 EDCF(단독 또는 혼합신용)를 공여하여 우리기업의 국제경쟁입찰 수주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검토

□ 비구속성원조(Untied Aid)의 전략적 활용

- World Bank, ADB 등 국제개발은행(MDB)과의 협조융자(co-financing) 사업 등에 비구속성원조를 허용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, 나아가 우리기업의 MDB 사업 수주기회를 확대
 - 타당성조사 등 수원국의 사업준비에 대한 자금·기술지원을 확대*, 비구속성 지원시 우리기업의 수주기반을 조성
- * EDCF 사업개발지원예산 : ('05) 0.8억원 → ('06) 4.4억원
- EDCF 사업참여 조건을 [한국법인 → 한국법인의 개도국 현지법인(자회사·손회사)]으로 확대

* 최근 우리기업이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, 동 지주회사의 자회사(국내기업의 손회사)를 통해 제3국에 수출하는 등 해외투자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부응

□ 국가별·사업별 지원한도 폐지

- 국가별(일반국 1.5억불, 중점국 3억불)·사업별(일반사업 5천만불) 지원한도를 폐지, 수원국별·사업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

(2) 지원프로세스 개선

- 중점지원국에 대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된 3-4년간의 지원전략·규모 등을 담은 「국별지원계획(Country Program)」 수립
 - 수원국이 수립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우선 지원하여 수원국의 경제·사회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
 - '06년중 베트남·인니에 실시하고 이후 여타 국가로 확대
- 「국별지원계획」을 바탕으로 수원국과 「연례 정책협의(Annual Policy Dialogue)」를 개최, 능동적으로 사업발굴
- EDCF 지원사업에 대한 「환경영향 심사지침」을 제정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EDCF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도모
- 중점지원국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지원한도·조건 등을 규정한 정부간 기본협정(Framework Agreement) 체결
 - 사업별 「정부간 시행약정(Arrangement)」을 생략, 사업당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 (별첨 4)
- EDCF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활용, 사업평가의 객관성·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운용에 적극 환류

(2)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

□ MDB와의 협력 강화

- MDB의 사업준비 컨설팅에 대한 지원, 본 사업 협조융자(co-financing) 등을 활성화
 -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MDB 사업 수주기회를 확대
- 수출입은행에 「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」를 설치
 - 국내 관심기업·컨설턴트를 대상으로 EDCF, MDB내 한국신탁기금, 기타 MDB 사업 등에 대한 상담, 관련 Web-Site 개설,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해 MDB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

□ 선진 유상원조기관과의 협력 강화

- 수은과 선진 유상원조기관[日(JBIC)·獨(KfW) 등]간 업무협약을 체결, 협조융자·정보공유·인적 교류 등을 통해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EDCF의 국제적 위상 제고

□ 국내 여타 원조 기관과의 연계 강화

- 정통부·KOICA 등의 타당성조사 사업과 EDCF 본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사업 발굴·준비를 도모
- EDCF 사업 추진시 각 부처의 해당분야* 기술협력과 연계를 통해 종합적 경제협력을 도모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

* 교육·정보통신·에너지·건설·환경·보건 등

- '05.1부터 재경부·외교부간에 운영중인 국장급 「원조정책 실무협의회」의 참여부처를 「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위원회」에 속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
- 「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위원회」의 구성원에 교육부·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추가

(4) EDCF 운용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

□ 「EDCF 운용 자문위」 설치

- MDB 근무경험자, 학계(ODA·지역·분야별 전문가 등), 산업계 등으로 구성, 정책자문을 통해 EDCF 운용의 전문성 제고

□ 수은의 EDCF 담당 인력·조직 보강

- 현재 30여명 수준인 EDCF 담당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
- 현행 지역별 조직에 정보통신·인프라 등 분야별 담당을 신설, EDCF운용의 전문성 제고
- 주요지원국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의 개도국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

□ 재경부·수출입은행의 EDCF 담당부서와 MDB와의 정보공유, 인적교류 등을 통해 선진 원조노하우 습득

< 별첨 1 > OECD/DAC 회원국의 ODA 지표('03)

국 가 명	GNI (10억달러)	인구 (백만명)	1인당 GNI(달러)	ODA ¹⁾ (백만달러)	GNI 대비 ODA(%)	1인당 ODA 공여액(달러)
호 주	493	19.9	24,800	1,219	0.25	62
오스트리아	250	8.1	31,100	505	0.20	63
벨 기 에	308	10.4	29,700	1,853	0.60	180
캐 나 다	854	31.7	26,900	2,031	0.24	64
덴 마 크	209	5.4	38,600	1,748	0.84	324
핀 란 드	160	5.2	30,800	558	0.35	107
프 랑 스	1,763	59.8	29,500	7,253	0.41	121
독 일	2,393	82.5	29,000	6,784	0.28	82
그 리 스	173	11.0	15,700	362	0.21	33
아 일 랜 드	128	4.0	31,900	504	0.39	126
이 탈 리 아	1,454	57.5	25,300	2,433	0.17	42
일 본	4,376	127.6	34,300	8,880	0.20	70
룩셈부르크	24	0.5	53,300	194	0.81	485
네 델 란 드	499	16.3	30,700	3,981	0.80	246
뉴 질 란 드	73	4.0	18,300	165	0.23	41
노 르 웨 이	222	4.6	48,600	2,042	0.92	454
포 르 투 갈	145	10.3	14,100	320	0.22	31
스 페 인	839	42.7	19,700	1,961	0.23	46
스 웨 덴	302	9.0	33,600	2,400	0.79	270
스 위 스	337	7.3	46,000	1,299	0.39	178
영 국	1,829	59.2	30,900	6,282	0.34	106
미 국	10,981	291.1	37,700	16,254	0.15	56
DAC 평균	1,264	39.4	32,000	3,138	0.25	80
한 국 ²⁾	576	47.9	12,020	366	0.06	8

주 : 1) 순지출 기준

2)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비회원국임

자료 : OECD, The DAC Journal,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

< 별첨 2 > MDG 8대 목표

- ① 절대빈곤·기아 퇴치
-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
- ③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
- ④ 아동사망률 감소
- ⑤ 모성보건 증진
- ⑥ HIV/AIDS,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
- ⑦ 지속가능환경 확보
-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

< 별첨 3 > 분야별 지원전략

정보통신

□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효과

- 선진국과의 정보격차(Digital Divide)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이나,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기구축된 인프라도 최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□ 우리의 비교우위

-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은 OECD 국가중 6위 수준이나 ('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), S/W 수출은 전체 IT의 1-2%에 불과하여 H/W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

- 다만, 전체 S/W 수출의 70%를 차지하는 시스템통합(System Integration : SI) 부문은 발전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

※ 「UN 경제사회국」은 '04년에 이어 '05년에도 한국의 '전자정부 준비 지수(E-gov't Readiness Index)'를 전세계 191개국중 5위로 평가

□ EDCF 지원방향

- 정보통신을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, 정통부의 기술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하여 「Digital 강국의 Digital ODA」 이미지를 구축하고,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

- 단순 기자재보다는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SI 위주로 지원

※ SI 사업은 「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」 분야중 하나로서, 중점 육성이 필요하고 꾸준한 업그레이드 수요 발생, 후속사업의 표준화 등 선점을 통한 후속사업 수주가능성이 매우 높아 EDCF 지원효과 극대화 가능

※ 상업성이 높아 「OECD 수출신용협약」의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 서비스·기기는 수출금융 등을 활용한 민간차원의 진출 모색

- 필요시, 우대금리 활용, 소액차관(2백만 SDR 미만) 활용, 수출금융과의 혼합신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

□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효과

- 세계은행*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심각한 infrastructure gap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하고, 향후 2-3년간 인프라 지원을 매년 10억불씩 증액, 세계은행 전체 차관의 40%를 지원할 계획

* 현재 개도국 인프라 투자는 GDP 대비 2~4% 수준이나, 보다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5.5%(저소득국은 7~9%)의 투자가 필요('05년 WB)

□ 우리의 비교우위

- 국내 건설업체들은 중동 및 동남아 등의 풍부한 해외건설 경험을 토대로 도로건설, 발전 정유시설, 해양설비 등 각종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
-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「전력 공급 시스템」 및 세계적 전력공급 기술능력* 보유
(’05.9 「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」, 산자부)

* 화력발전, 초고압 송변전설비 · 운영, 송배전 손실관리, 배전자동화 등

□ EDCF 지원방향

- 국내 여타 원조기관 및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· 자원개발 거점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(Geographical Targeting) (그림 3)
 - 개도국정부 · 현지공관 · 관계부처(산자 · 건교 · 정통부 등)와 「정책협약」을 통해 개도국내 중점개발구역 선정
 - EDCF는 해외 투자 · 자원개발 거점지역의 교통 · 통신 · 에너지 · 용수공급 · 폐수처리 · 직업훈련기관 등 해외 투자 · 자원개발을 위한 물적 · 인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

- 각 부처의 기술협력사업은 해당지역의 개발계획 수립, 투자 환경 개선, 사업타당성 조사, 산업인력 양성 등을 지원
 -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외 투자·자원개발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기업에 지원
 - 중장기적으로 개도국내에 한국기업 전용공단, 자원개발 거점, 나아가 ‘Little Korea’를 건설 기반을 조성
- 전력분야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력산업 Value-Chain* 전반의 일관 공급시스템 수출기반 조성
- * 설계·기획·컨설팅 → 건설·시공 → 운영·정비
- * 송전망 사업은 제작(중전기, 철탑, 케이블, 배전반, 감시·운영시스템 등), 엔지니어링(설계·감리), 시공(토목·건축·설비) 등 관련분야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집약적 대규모 설비산업이며, 국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 높음
- 단, 최근 발전 등 전력사업이 상업성 사업으로 판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, 비상업성 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
- 교통분야의 경우, 우리기업 밀집지역 등의 도로·철도·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과 아울러,
- 주요국의 교통환경 개선, 교통망 확충방침에 대응하여 LNG 버스, 경전철 등 미래형 교통수단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선점을 추진(단, 비상업성 사업을 선별 지원)

【 그림 3 】 해외 투자·자원개발 거점지역 개발 개념도

(1) 우리정부와 개도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선정



(2) 기술협력을 통해 동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Master Plan을 설계한 후 개도국 중앙·지방정부에 필요한 사업 Proposal을 제출



(3) EDCF 자금을 활용하여 한국계 업체가 진출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: 상업성이 없는(commercially unviable) 프로젝트 위주로 건설



(4) 동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면, 이른바 상업성이 있는(commercially viable) 분야에 본격적으로 한국계 민간기업이 진출(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)

인적자원 개발

□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효과

- 인적자원 개발(Human Resource Development : HRD)은 경제·사회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, 개도국들은 부가가치 창출 확대와 청년 실업 해결,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HRD를 전략적으로 활용

□ 우리의 비교우위

- 보편적 초등교육을 통한 낮은 문맹율, 높은 대학진학율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인력기반, 실업계고·전문대학·기능대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등의 경험 보유
- 아시아지역의 개도국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HRD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 경험에 높은 관심
 - * 개도국은 미국·유럽 등 너무 앞선 선진국보다 한국의 HRD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경향
 - * 우리나라는 교육차관을 통해 대학시설 확충 및 실업교육 증진에 활용, 경제개발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한 경험 보유
- 특히, 우리의 e-Learning 기술·경험은 세계적 수준으로, 개도국 교육여건·학습기반 확대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가능

□ EDCF 지원방향

- 교육시설의 단순 건축보다는 e-Learning을 통한 콘텐츠 제공, 분야별 HRD 전문가의 집중적 컨설팅 및 교육기자재 제공, IT센터 건립 등 **교육정보화 사업** 위주로 지원하여 지원효과 제고
- 초등교육보다는 실업교육·직업훈련을 위주로 지원, 수원국의 산업계와 우리기업의 개도국 현지법인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기반 조성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
- 교육부·노동부·KOICA 등의 교과과정 개발, 전문가 파견, 기술연수생 훈련 등 **기술협력 사업**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

보건 · 의료

□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효과

- 보건 · 의료분야는 「MDG 8대 목표」중 3개 항목을 차지*할 정도로 핵심적인 국제개발목표

* ④ 아동사망을 감소, ⑤ 모성보건 증진, ⑥ 에이즈 ·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

- 개도국은 보건 ·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서비스도 열악한 수준으로, 시설 공급은 원조자금에 상당부분 의존

□ 우리의 비교우위

- 의약품의 경우,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'03년 세계 10번째로 FDA 승인신약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시현

* 원료의약품은 중국 · 인도 등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수출 감소추세

- 의료기기의 경우, 단순 저가장비(주사기 · 혈압계 등)를 수출하고 CT, MRI 등 첨단 고가장비는 수입하여 무역적자 지속

- 그러나, 최근 초음파진단기 · 심전계 ·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 일부 첨단장비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

- 의료서비스의 경우, 경쟁력이 미국대비 76% 수준으로, 일본(85%) · 유럽(87%)보다 낮은 수준이며, '03년 현재 해외진출 병원은 5개미만(분원형태의 소규모 진출 포함시 25건 수준)

□ EDCF 지원방향

- 단순 병원건축보다는 의약품 · 의료기기 · 의료서비스 · 건설 · 엔지니어링 · IT 기술 등을 패키지화한 사업 위주로 지원하여 수원국의 보건증진과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도모
- 구체적으로는, 모자보건 증진, 의료시설 현대화, 기초검진센터 설치, Vaccine공장 건설, 병원정보화 사업 등을 중점지원

□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효과

- “지속가능환경(Sustainable Environment) 확보”는 「MDG 8대 목표」중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증대

* 안전한 식수 확보, 위생시설 개선,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이 MDG “지속가능환경 확보”의 세부목표 및 성과지표

- 다수의 개도국이 정수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

- 급속한 산업화 · 도시화가 진행되는 아시아와 동유럽 개도국 환경시장은 연 7%대의 높은 성장 예상 ('03, EBI)

* 전세계 환경시장은 ('01)5,434억불 → ('10)7,083억불로 연 3%대 성장 전망

□ 우리의 비교우위 ('05.11 「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전략」, 환경부)

-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추격단계로 평가

* 세계경제포럼(WEF)의 환경과학기술지수는 세계 11위('02년)

- 집진기술 · 폐수처리기술 등 사후처리분야는 상업화 단계로 선진국 대비 70-80% 수준에 육박

*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의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

- 사전예방 · 환경복원 등 미래형 기술은 선진국과 일정부분 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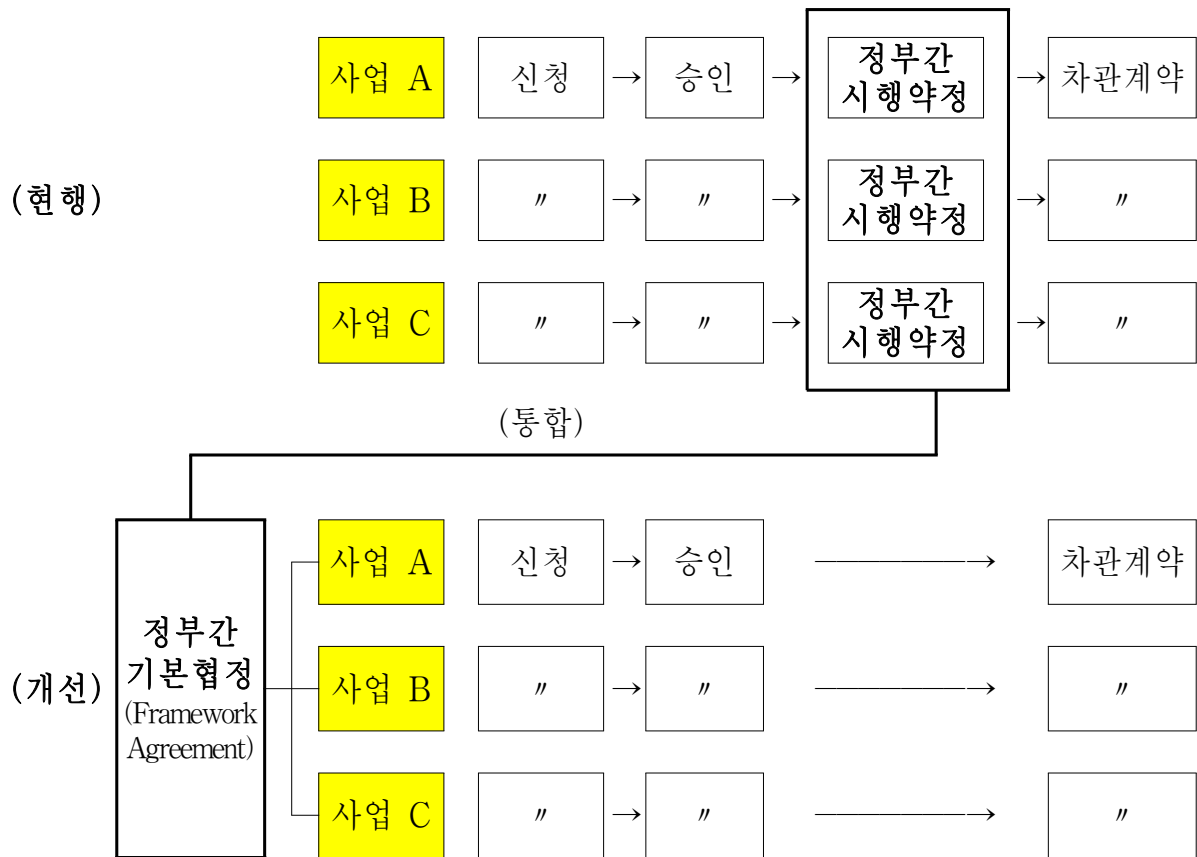
- 환경산업 수출은 매년 40% 이상 증가 추세 ('04년 8,450억원 수출)

□ EDCF 지원방향

- 사후처리분야를 중심으로 EDCF를 지원, 개도국의 지속가능 환경 확보를 지원하고, 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도모

- 특히, 기자재 · 설비 투입이 많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하수도 시설, 오폐수 처리, 고체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

< 별첨 4 > 지원절차 개선(안)



* 1개국에 4년간 20개 사업을 지원할 경우 소요시간 비교

(현행) 총 128개월 소요 (6.4개월×「정부간 시행약정」 20건)

(개선) 총 6.4개월 소요 (「정부간 기본협정」 1건 체결로 「정부간
시행약정」 20건 생략)

< 별첨 4 > EDCF 지원 성공사례

중국 흑룡강성 고속도로 건설장비 공급사업('00년 15백만불)

- 목단강-영안시 구간 31km의 도로 건설용 기자재 공급
 - * 목단강시는 6개의 철도노선과 166개의 도로노선을 통해 러시아·동유럽·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
- 중국측 : 흑룡강성 내 무역량 증대 및 인근 관광 유적지의 유동인구 증가에 대처, 인근지역 **투자환경 및 경제력 향상에** 기여
- 한국측 : 아국산 건설 중장비 및 기자재 공급으로, 우리기업의 중국내 영업기반 확충에 기여 (특히, 굴삭기의 경우 국산제품 인지도 급상승으로 **중국시장의 44% 차지**)
동 지역 인구의 30%를 차지하는 조선족의 자긍심 제고

가나 정유제품 저장소 건립사업('90년 13백만불)

- 수도 Accara 등 정유제품 비축기지(3개 지역) 건설
- 가나측 : 정유비축용량 확대(21일 → 37일)로 국가 전략목표인 에너지 확보 달성 및 정유제품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
- 한국측 : 후속사업 발굴·수주(테마 정유공장 현대화 2.7억불 등 다수) 및 인근시장(나이지리아·콩고·앙골라 등) 진출거점 확보

튀니지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사업('97년 30백만불)

- 총 6만석 규모의 올림픽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건설
- 튀니지측 : 지중해 올림픽('01) 및 African Cup 축구대회('04) 성공적 개최 및 이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외화수입 증대
- 한국측 : African Cup 축구대회 개막식 행사용역을 수주(1백만불), 여타 건설사업 참여 기반 조성